



# 이제 LPG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하다



## 프로판 활성화방안과 대책은

현재 프로판은 수요가 축소 내지 정체되고 있으나 업계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그리 어려운 상황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행 유통단계를 어떤 형태로든 축소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전판매사업자의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뼈를 깎는 노력 공존공생을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

또한 용기보다는 소형저장탱크 중심의 공급을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GHP나 흡수식 냉난방기 설치 등 신규수요 개발, 충전사업자간 통폐합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서민들의 연료인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법적 기준 완화, LPG와 LNG간 균형적인 정책 추

진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사업 다각화 방향과 계획은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협의해 LPG에 DME를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충전소에서 LPG뿐만 아니라 CNG나 LNG를 함께 취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동차충전소내 편의점 설치 등도 검토과제다.

## 유통비용 절감대책과 방향은

정부와 LPG업계는 공동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프로판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밸브가격이 상승하면서 용기재검사 비용도 인상됐으며 고의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의 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는 기존 밸브가격보다 약 50%정도 비싸 가뜩이나 어려운 LPG 업계 및 소비자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세서민들의 연료인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수세를 폐지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법적 기준 완화, LPG와 LNG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업계는 배송센터와는 별도로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밸브 재사용, 차단기능형 LPG 용기용밸브 의무화 제외 등을 추진중이다. LPG용기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 용기는 3년마다, 15년이상 20년미만 용기는 2년마다, 20년이상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나 동조항은 30여년전인 지난 73년 제정된 것으로 용기제조기술 향상, 용기 재검사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해 용기의 상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양호해졌기 때문에 현행 용기 재검사주기는 업계현실과 맞지 않다는 협회의 용기재검사주기 연장 건의를 수용하여 06년도 정부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차단기능형 용기용 밸브는 외국의 사용에도 없으며 기존 밸브보다 훨씬 비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정부에 바라는 LPG업계 지원책은

최근 산자부가 LPG와 LNG간 균형발전을 정책과제로 삼고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특히 정부에서 LNG 탱크로리 공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영세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의 경우 특수세를 폐지하고 LPG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LPG판매소 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택시의 경우 부가세의 50%를 면제하고 있고 농수산물, 병원비 등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LPG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방안은

청정하고 편리한 연료라는 점에서 도시가스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인식차는 큰 것 같다. LPG수입사가 중심이 되어 충전/판매업계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안전공급계약제에 따른 공급자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계도물 배포,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복장, 용기취급방법 개선 등을 통해 서서히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권순영전무